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천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42
----------	------

발의년월일 : 2020. 04. 09

발의의원 : 정천락 의원
김규학 의원
김성태 의원
김혜정 의원
송영헌 의원
윤영애 의원
이만규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배지숙 의원
장상수 의원
전경원 의원

1. 제안이유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 해당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함(안 제6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

나.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7조)

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센터”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

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 할 수 없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u>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u> 3. <u>센터의 시설물 및 물품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u>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삭제> 2.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 -----
제7조(구성) ① ~ ⑤ (생략)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 신설)	제7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하되, 한 차례만 -----.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센터의 위탁 및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위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삭제>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여부는 위	<삭제>

<u>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u>	
<u>⑤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삭제〉

(붙임 2)

관 계 법 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